

가족복지 전달체계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 승 미(우석대학교 교수) · 송 혜 림(울산대학교 교수)
라 휘 문(성결대학교 교수) · 박 정 윤(중앙대학교 교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러가지 가족관련 현상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잔여적 복지 지원을 넘어 보편적·예방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으로 보편적 가족정책이 시행되었다. 가족정책 서비스의 대표적 전달체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가족정책 전달체계가 이원화된 것은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그 지원이 다문화가족에 집중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전달체계를 독립적으로 발전시킨 것에서부터이다. 이 센터의 독립적 운영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양 센터의 운영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이원화체제로 분리·운영되는 가족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발전적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해, 그리고 가족정책 전달체계 및 가족지원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달체계의 운영모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내용으로는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원활한 연계와 가족지원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센터의 통합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간관리자급 이상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제공하여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전달체계의 통합에 대한 찬반여부를 분석한 결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82.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50%가 찬성하였다. 둘째,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는 양 센터 종사자들을 입장이 유사하였는데 거시적 측면에서의 사회통합에 대한 부합성, 기관운영의 효율성, 다양한 가정을 위한 사업으로의 적절성, 두 센터의 최종목표와 사업의 유사성, 상호보완, 이용자 편의도모, 서비스 중복과 누락 예방 등이었다. 반대하는 응답자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위탁 기간이 상이하여 운영의 방향성이 다르므로 통합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센터 통합의 의미를 질문한 결과 종사자는 명칭 통합에서부터 조직과 기능의 재조직이나 통합, 위탁법인 통합까지로 여기고 있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특히 조직통합에 있어서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다문화가족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넷째, 센터 통합 시에 발생하는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예산확보와 인력의 승계보장 및 업무분장에 대한 대안, 위탁기관차이의 문제해결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은 법적 통합, 사업 간의 통합과 공간 확보 및 인력확대, 공통필수사업에 대한 조정,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 업무분장 명료화, 통합센터의 철학과 가치정립을 위한 실무자 교육과 이해 증진, 일원화된 업무지침 시행, 중앙부처간의 의견조율 등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점진적 통합을 강조하였다. 지역별로 사업의 강조점이나 유형을 분류하고, 인력규모의 경우도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종사자들은 양 센터 통합이 가족복지의 효율성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극복하고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위상을 높이고 서비스의 양적, 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할 것이다.